

(유치원+보육)

유치원생 예산 빼앗아 유보통합에? 교육감協 “통합은 별도 예산으로”

“유보통합 재원 추계, 조달 방안 없어”... 유치원 예산, 어린이집 지원 이미 받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유보(유치원+보육)통합 정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 “유보통합을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유보통합 소요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유보통합 비용 추계와 예산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의 비용 추계,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총비용, 예산 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 소관 보육 예산은 지난해 기준 약

10조 원에 달한다.

협회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중등학생들이 이미 지난해 예산 1조 5000억 원을 대 학생들에게 양보했다”며 “이걸 다시 유치원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지난해 10월 인천교육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 곳 보내려는 정부의 교부금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내용이 담겨 있다.

최태용 기자

인천시의회, 화전(火電) 지원범위 확대 추진에 영흥면 주민 ‘반발’

영흥면 주민들, 개정 전면 철회 성명
“석탄화력발전, 건강·환경권 피해 막심”

인천시의회가 웅진군 영흥면 말고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영흥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후 영흥면주민자치회 등 영흥면 주민들은 웅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전면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석탄화력발전보다 훨씬 미미하다”며 “영흥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정 발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생체시료 중 수은, 카드뮴이 높게 검출돼 영흥면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했다.

개정안은 이순하 시의원(민주·서구5)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기존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시개발계획’을 ‘발전소 주변개발계획’으로 바꾸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일 오후 영흥면 주민들이 웅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전면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웅진군 제공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웅진군 말고도 서구 등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에만 줄 수 있다.

웅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79억여 원 중 올해 본예산 기준 54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추가로 원도심특별회계를 통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서구는 LNG 화력발전소가 4곳이 있

는데, 지원받는 예산이 없어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달 안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김현기 영흥면 주민자치회장은 “개정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한 뒤, 방향을 잡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농어민 수당 반드시 도입해야”

농어업 사회적·환경적 기능 인정, 종사자 위한 사회보장제도

박흥열 강화군의원(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은 현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농어민 수당’을 꼽았다.

그는 “농업과 어업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기능이 있다”며 “농어업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어민 수당이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한 이후 2023년 6월 현재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돼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울산시 등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연 30~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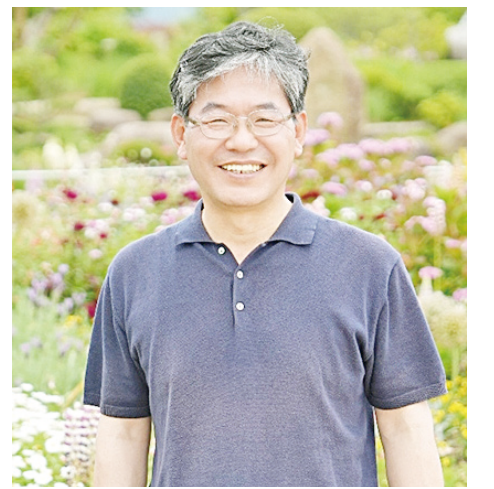
인천도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다. 인천시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10개 군·구와 협의를 시작했다.

시는 연 60만 원 지급에 재원 부담을 반씩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강화군이 120만 원 지급에 시에서 재원 70%를 부담하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박 의원은 “당시 강화군이 120만 원을 주장한 이유는 시 부담을 가중시켜 수당 지급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 같은 당 윤재상 시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유천호 군수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농어민 수당 조례는 당시 강화군이 지역구인 윤재상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윤 전 시의원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유



박흥열 인천 강화군의원. 박흥열 의원 제공

군수와 경선을 치렀고, 진통 끝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모두 무소속 출마했다.

박 의원은 “연 60만 원이면 군이 부담할 예산은 연 40억 원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규모”며 “유 군수가 결단한다면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수당 지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산한 인천 전체 수당 지급 대상자는 2만 명, 강화군에만 1만 2500명 정도다.

박흥열 의원은 “좋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강화군과 웅진군은 인천의 미래다”며 “인천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지원이 적다.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인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부평구, 교통사고 잦은 4곳 환경 개선 나선다

인천 부평구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의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부평구는 오는 11월까지 인천시,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수역사거리 27건, 벽돌막사거리 42건, 부평여고 입구 18건, 송내IC 입출구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개선사업 대상도 이곳이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를 조정하고

횡단보도 투광등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구간별 미끄럼방지포장을 통해 차량속도를 감속하는 시설물도 추가할 계획이다.

부평여고 입구에는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방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벽돌막사거리에는 바닥신호등도 설치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별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